

광주전남 공유재산 임대료 대폭 감면한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자 289곳...우치공원 등도 검토 전남도, 2~7월 사용료 50% 감면...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본격화한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통종사자를 돕기 위해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 3월19일 이용섭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킴이 제2차 대책' 중 하나인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인하의 후속 조치다.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은 지난 2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이다.

그 동안 사용료를 1000분의 50으로 임대료를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감면 요율 1000분의10으로 낮춰 80%의 감면 효과를 보도록 했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호남청과, 두레청과, 중도매인 등 289곳으로 감면금액은 총 8000여만원이다.

서부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자는 관리사무소(062-613-5475)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오는 5월 중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소비위축에 따른 도매시장 거래량 감소로 최저거래 미달 중도매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처분 등을 감경해 줄 계획이다.

시는 또 우치공원 등 시 산하 임대 사업장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에 따른 임시 폐쇄 조치 후 재개장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입장객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심각한 누적적자를 겪으면서 직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도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남도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의 사용·대부료 50%를 감경한다.

휴업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임대료를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 대부료를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 공유재산과 일반 대부율의 절반 수준인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전남도는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할 부서 또는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일 전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경영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김정은 "정상생활 못해" "확인 안돼"

미 언론들 엇갈린 보도...미 전문가 "확실한 정보 기다려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두고 미국에서 당국자의 발언을 토대로 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헌선이 어지고 있다.

미 CNN방송은 2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한 논란을 보도하면서 미국의 국방 당국자를 인용, "미군의 평가는 현재 시점의 증거가 김 위원장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음을 시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전날 직접적 정보가 있었다는 미 당국자를 인용,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다는 첩보를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날은 "김 위원장이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첩보를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가 김 위원장의 건강이 심각하다고 보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관련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브리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김 위원장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면서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정보 제공에 인색하고 리더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그동안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의 건강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많았다"면서 "확실한 정보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 카지야니스 미 국립연구소 한국담당 국장도 과거에도 북한 관련 보도가 금세 오보로 드러난 사례가 많아 북한 관련 보도에 회의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방역관리자 지정 건강상태 수시 확인

중대본, 생활방역수칙 발표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 시대에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공동체는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열 등 건강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 조성"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긴급고용안정 10조 별도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하는 한편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압박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은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산업 분야 중에서

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 위기가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우선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을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안 차단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식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

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부터 사실상 매주 한 차례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대통령의 결단이나 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체제가 가동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두고 미국에서 당국자의 발언을 토대로 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헌선이 어지고 있다.

미 CNN방송은 2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한 논란을 보도하면서 미국의 국방 당국자를 인용, "미군의 평가는 현재 시점의 증거가 김 위원장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음을 시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전날 직접적 정보가 있었다는 미 당국자를 인용,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다는 첩보를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날은 "김 위원장이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첩보를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가 김 위원장의 건강이 심각하다고 보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관련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브리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김 위원장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면서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정보 제공에 인색하고 리더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그동안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의 건강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많았다"면서 "확실한 정보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 카지야니스 미 국립연구소 한국담당 국장도 과거에도 북한 관련 보도가 금세 오보로 드러난 사례가 많아 북한 관련 보도에 회의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北, 지난해말부터 긴급시 김여정 권한대행 준비

요미우리, "김정은 건강 악화에 프랑스 의료진 1월 방북"

북한에서 작년 말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긴급시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22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서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가 개최됐을 때 김 위원장이 사망 등을 이유로 통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집중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

한미일 소식통은 "그 이후 김여정 명의의 당과 군에 지시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은 체제선전을 담당하는 당 선전선동부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당 중앙위 총회를 거쳐 인사권을 장악한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취임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병이 복합적으로 악화된 프랑스 의료진이 1월 북한을 방문했다는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김여정 권한대행' 준비 작업도 그 이후에 속도가 붙

었다는 것이다.

김여정은 김일성 주석의 피를 이어받은 '백두 혈통'이면서 김 위원장과는 스위스에서 함께 유학했다. 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으로 북한 내 2인자로도 알려졌다. 김여정은 3월 3일과 22일에 자신의 명의로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 같은 날 21일 김 위원장의 전술요무도구기 시험발사 사할 때 동행한 것은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요미우리 보도 내용과 관련해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묻자 "북한을 둘러싼 동향은 중대한 관심을 갖고 평소 정보 수집, 분석에 힘쓰고 있다"며 "그 하나하나가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스카 장관은 "우리나라로서는 납치,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완전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냥**